

## 담양군 '뿔났다'...제지업체 행위 묵과 못해

담양군 대전면에 소재한 제지업체가 최근 담양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자 담양군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담양군은 "지역과 주민의 희생을 밀거름 삼아 성장해 온 기업이 불법 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행정으로 치부하는 일련의 행태는 담양군민과 담양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문제가 된 제지업체는 1988년에 설립된 공장을 지난 2013년 국내의

중견 제지 전문기업이 인수하여 운영중인 골관지 생산업체로 그동안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물질 등 업체

의 특성과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인한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에 대한 환경위해성 때문에 주민들은 고형연료 대신 과거에 사용했던 천연가스(LNG)를 이용 할 것과 공장폐쇄 및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주민의 민원은 외면한 채 고형연료사용에 대한 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어 2018년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2018년 10월 18일 위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고형연료제품(SRF)을 100% 확대해 사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담양군은 악취 및 소음, 폐수, 다이옥신 등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지역의 환경과 주민 생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이익을 위해 당해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회사는 개정된 법률시행 2일전에 이에 불복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SRF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 위험은 도외시 한 채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고, 군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라 SRF 사용을 위한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재검토 과정 없이 당초 신청사항을 행정심판 재결취자에 따라 재처분하라는 취지로 재차 간접감제를 신청하여 지역과 주민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어니지의 구심까지 들게 하고 있다.

군은 "회사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은 SRF 사용을 위한 행정심판 제기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점검 사항으로 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 기준 초과, 개발제한구역 내 참고 등 무단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는" 입장이다.

이어 "회사 측이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노력도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정당한 지도점검을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보복행정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생존권을 걸고 공방이전과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담양군은 "향후 회사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고죄 등 법적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 군·군민 무시처사 무고죄 등 법적 조치 강력대응 예고 지역민의 희생 발판 삼아 성장 불구 사회적책임 눈감아 주민 생명·보건환경 도외시한 채 행정심판·소송 남발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 25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163%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음주상태로 약 500여m를 차량을 운전(42·여)씨가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관련기사 4면>

### 한전 'e밸리 조성 순항' 누적 투자유치 396개사 달성

한국전력이 빛가람(나주)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Energy Valley)'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에너지밸리는 한전이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연관기업 500개사 유치로 목표를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프로젝트다.

한전은 2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김중갑 사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해 솔빅테크 등 36개 투자기업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36개 기업 중 7개사는 용지계약, 공사착공 등 투자실행을 이미 완료했으며, 협약 체결로 인한 투자금액은 993억원에 고용창출 인원은 568명이다.

이로써 에너지밸리 투자협약 기업은 총 396개사로 증가해 2020년까지 500개사 유치 목표 대비 79%를 달성했다. 누적 투자금액은 1조8019억원, 고용창출 효과도 958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날 한전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에너지밸리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에너지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에너지밸리 기업에 대한 우수기술 전수를 위한 산업현장 교수지원' 등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통해 광주와 나주지역에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들어서고 있다.

서은홍 기자

### '느림보' 경전선 광주송정~순천구간 전철화 속도 불나

"느림보" 경전선 광주송정~순천구간 전철화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 ~순천간 전철화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현장

오늘 KDI 현장조사, 경제성 결과 2개월 단축전망  
국회서 정부·전문가 합동토론회 타당성 '군불'

망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개통이 목표인 경전선 광주 송정 조사가 26일 순천 소재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에서 진행된다. 이날 재조사는 KDI와 회계, 전문 기술자 등 5명이 참여해 경제성 평가에 나선다.

완료될 것으로 봤지만, 최근 2개월 정도 단축된 9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KDI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의 종합평가(AHP)만 남는다.

이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전남도는 10월 기본계획 착수 목표로 뛰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내년도 국고예산안에 기본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경전선 전철화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맞춰 국회에서도 군불을 지핀

다. 광주 송정~순천간 경전선 전철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토론회가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같은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9명이 주최하고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경유지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진석 교통연구원 박사가 '호남권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화 실현방안'을 설명한다.

김정환 기자

대한민국 최초 '블루 플래그' 국제인증 획득

**완도**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오세요!

해수욕장명	개장기간
신지 명사십리	7.08. ~ 8.25.
금일 명사십리	7.19. ~ 8.18.
신지 동고	7.19. ~ 8.18.
약산 가사	7.19. ~ 8.18.
청산 지리	7.19. ~ 8.18.
청산 신흥	7.19. ~ 8.18.
보길 애송	7.19. ~ 8.18.
보길 중리	7.19. ~ 8.18.
보길 동리	7.19. ~ 8.18.
생일 금곡	7.19. ~ 8.18.
소안 미라	7.19. ~ 8.18.

생일 금곡 해수욕장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